

[道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2013. 9. 10]

CONTENTS

01_ 조사의 개요

02_ 충청남도의 인권의식평가

03_인권침해와 차별

04_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5_ 인권교육 및 행정

06_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1

조사의 개요

01. 조사의 개요

01_1 조사의 배경

◉ 인권의 개념

-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
-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도민의 권리

◉ 인권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정책 현황

- ▶ UN 세계 인권 선언(1948)
- ▶ 대한민국 헌법(1987)
- ▶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

◉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현황

-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09, 2012)
-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2012)
- ▶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2. 5)

01. 조사의 개요

01_2 조사의 목적

-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명시
 -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인권 의식을 파악할 필요성 제기
- 충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 ▶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마련
 - ▶ 도민의 인권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파악

충청남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목적

충남도민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01. 조사의 개요

01_3 조사 방법

- ◉ **조사대상**

- ▶ 만 19세 이상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성인 남녀

- ◉ **유효표본**

- ▶ 총 1328명

-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 ◉ **조사기간**

- ▶ 2013년 5월 22일 ~ 2013년 6월 18일

- ◉ **표본추출 방법**

-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성, 연령, 인구 비례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

- ◉ **분석방법**

- ▶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해서 분석
- ▶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등의 통계분석 실시

01. 조사의 개요

01_4 조사내용

- **충남의 전반적 인권 의식 및 평가**
 - ▶ 전국/충남도의 인권의식 비교
- **충남도의 인권 침해와 차별**
 - ▶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각 계층의 인권존중 정도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 ▶ 일상생활, 경제활동, 사회복지, 교육, 사회참여 영역에서 인권 상황
- **충남의 인권 교육 및 행정**
 - ▶ 인권 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교육프로그램 등
 - ▶ 충남도 행정의 인권보장 정도 및 교류 필요 기관
- **인권 현안과 정책**
 - ▶ 자유권적/사회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 향후 조사 시 비교 자료로 활용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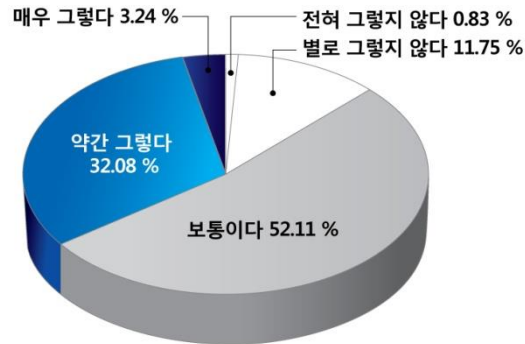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02.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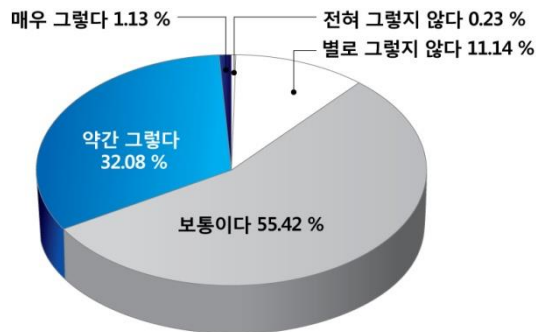
02_1 인권존중 인식과 인권약자 존중

인권 존중 인식

전국(3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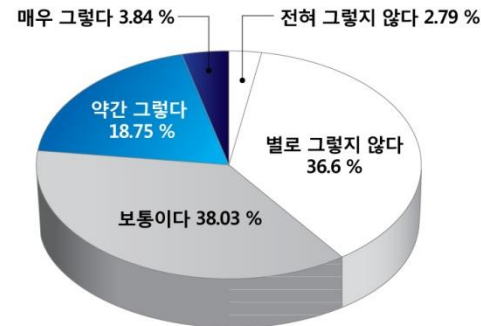


충남(3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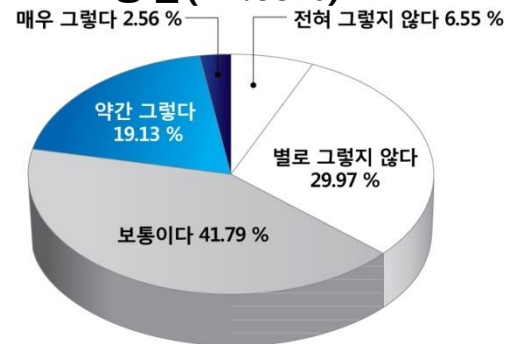


인권약자 존중

전국(22.59%)



충남(2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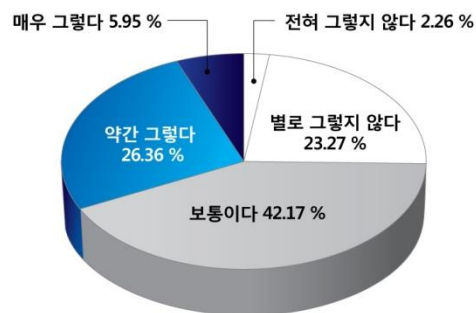


02.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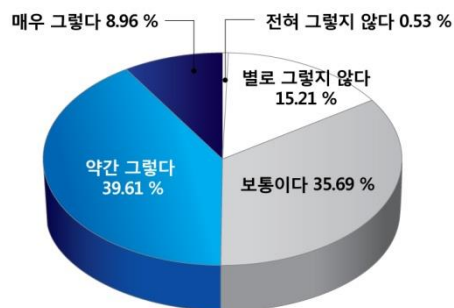
02_2 인권개선과 법체계 인지

인권 개선 인식

전국(3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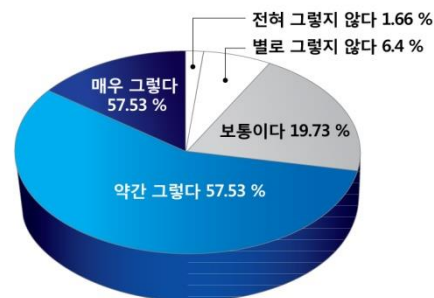


충남(4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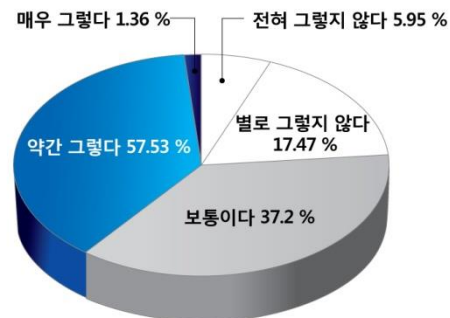


법 체계 인지

전국(72.21%)



충남(39.39%)



02.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02_3 충청남도 인권의식 평가의 시사점

- 인권 상황에 대한 낮은 평가: 인권상황에 개선 필요성 인식
 - ▶ 충남도민은 전국 및 충남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림
 - ▶ 충남도민은 충남의 인권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
 - ▶ 그러나 충남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인식
 - ▶ 제도적 차원의 인권증진 노력이 미약
 - ▶ 충남도민은 인권정책 중 필요한 것은 인권약자의 보호,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의 보장으로 꼽고 있음
- 특히 충남에서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지역차원의 인권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약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 자유권적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신체구금		개인정보공개		양심 자유 침해		집회 자유 제한		노동권 침해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6.27	25.75	25.68	23.31	17.78	32.00	19.05	29.67	23.34	30.49

▶ 개인정보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호하다는 평가가 우세

• 사회권적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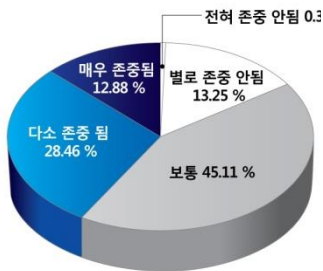
환경권 침해		불공평한 교육		사회복지 제한		건강권 제한		주거권 제한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23.34	29.98	35.15	18.45	28.39	16.93	32.46	19.34	20.78	27.56

▶ 불평등한 교육, 사회복지의 제한, 건강(부적절한 질병치료) 문제에 부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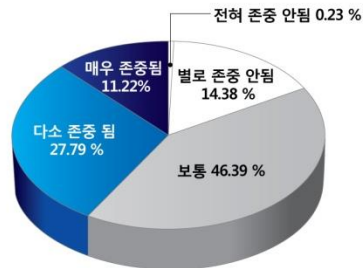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2 인권약자 및 일반 도민 인권존중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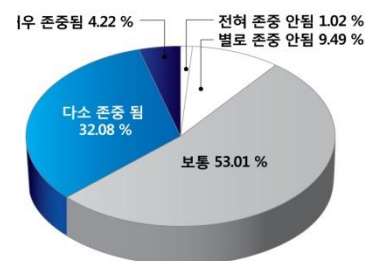
아동(4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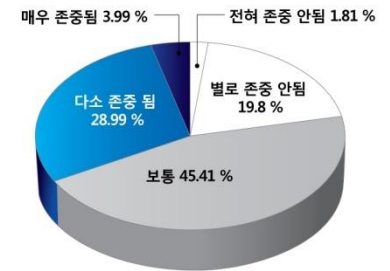
청소년(39.01%)



도민(36.30%)



여성(3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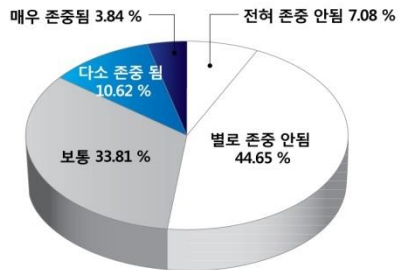


- 아동, 청소년, 일반도민, 여성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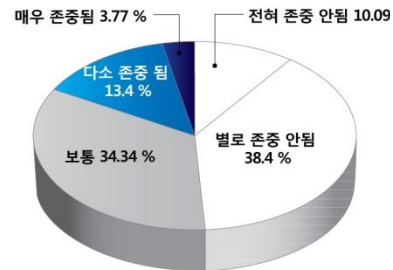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2 인권약자 및 일반 도민 인권존중 의식(부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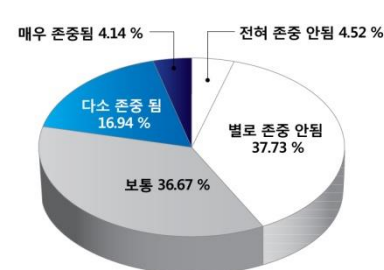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5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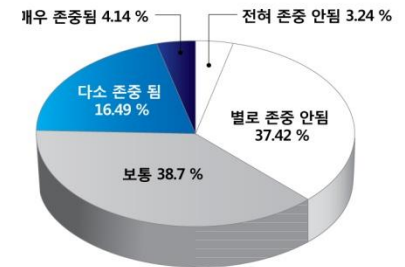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48.49%)



다문화 이주여성(42.25%)



장애인(40.66%)



-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과자, 다문화 이주여성, 장애인 순으로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3 충청남도 인권침해와 차별 조사의 시사점

● 인권 약자의 인권존중 미흡과 사회권적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 ▶ 충남도민은 장애인, 다문화 여성,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인권약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 자유권적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반면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우세. 새롭게 등장한 인권문제에 대응 필요성 대두
- ▶ 확장된 개념의 사회권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 충남의 인권정책의 방향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인권 개념은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지향하는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충청남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함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4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원인

-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1순위, %)

출신 국가	성별	경제 지위	나이	종교	용모	학력 학벌	성적 지향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상태	질병	정치 입장
8.07	7.69	33.33	7.54	3.77	6.79	12.29	1.81	5.13	5.88	2.04	3.09	2.56

-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1순위+2순위, %)

출신 국가	성별	경제 지위	나이	종교	용모	학력 학벌	성적 지향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상태	질병	정치 입장
22.10	25.04	83.41	22.93	10.71	20.29	41.78	6.41	16.59	21.04	8.07	9.50	12.22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5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

● 인권 침해 시 조치사항(중복응답, %)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	청와대 총남도 시군 진정	수사기관 신고	시민단체 도움요청	법률전문 가 자문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	인터넷 부당함 호소	기타	어떤 행 동도 취 하지 않 음
31.27	2.77	3.64	4.04	4.28	3.48	8.16	0.24	53.76

● 만약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취할 행동(중복응답, %)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	청와대 총남도 시군 진정	수사기관 신고	시민단체 도움요청	법률전문 가 자문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	인터넷 부당함 호소	기타	행동취하 지 않음
36.82	12.05	11.14	10.92	8.06	8.43	11.60	0.00	0.98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6 인권 침해와 차별 조사의 시사점

●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응: 현실적 침묵과 적극 대응 의지

- ▶ 충남도민은 충남도민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과반 이상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
 - ▶ 무대응 이외의 대응양상은 직접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앞으로 일어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의 직접해결, 행정기관의 진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
 - ▶ 대응양상은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양상이 우세
-
- 인권침해나 차별발생 시 충남도민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즉 상담, 중재, 구제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따라서 사소한 침해의 중재부터 피해의 상담, 구제, 보상까지 포괄하는 중간 기구의 운영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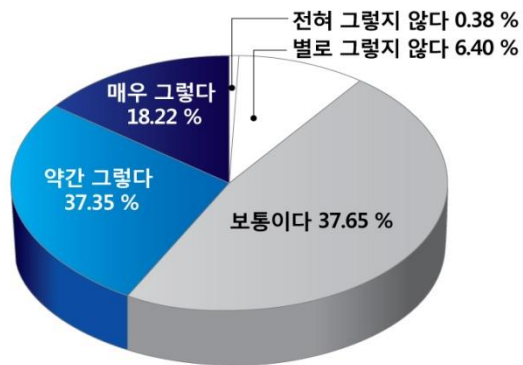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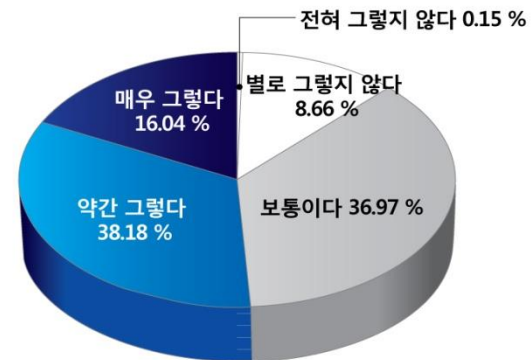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1 노인의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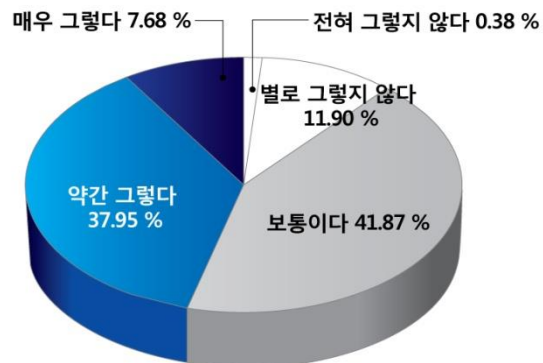
고독과 외로움(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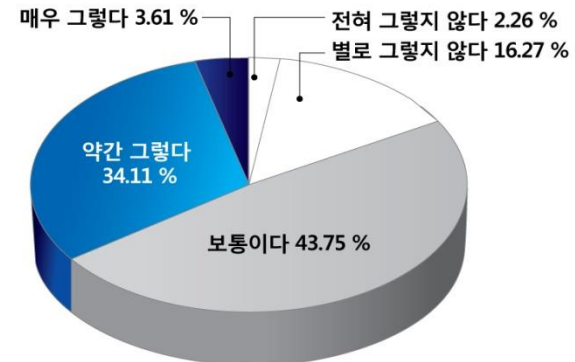
구직의 어려움(54.22%)



운동시설 프로그램 부족
(55.57%)



현안 논의 장소 부족
(37.72%)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1 노인의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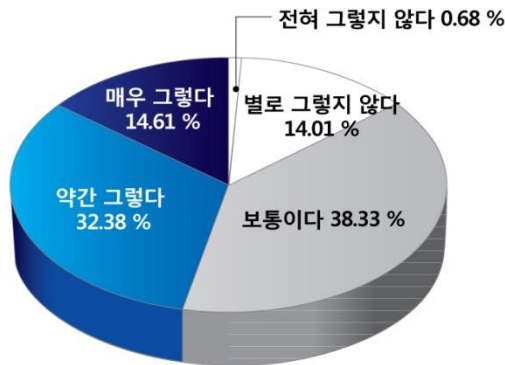
● 충남 노인의 인권상황 인식: 빈곤과 사회관계의 단절

- ▶ 충남도민은 노인들에 대해 일상생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 영역, 교육과 사회참여 부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 어려움, 구직활동의 어려움, 일상의 고독,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응답
- 조사결과로 추론하면 충남 노인의 상황은 구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는 악순환 과정에 놓임
-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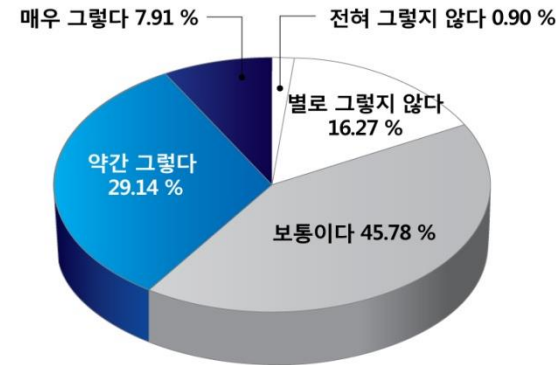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2 청소년의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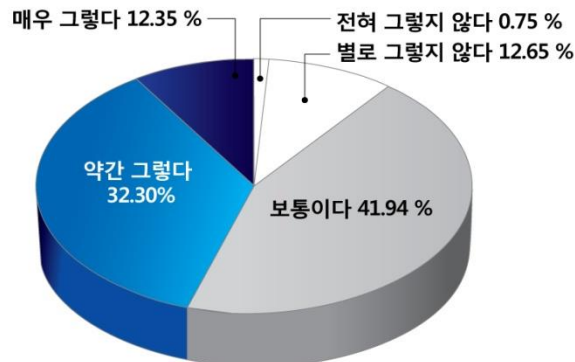
여가 시설 부족(4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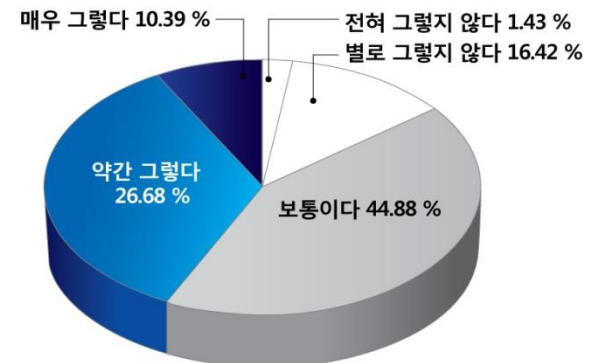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37.05%)



보충/야간학습 강요 (44.65%)



종교활동 강요(37.27%)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2 청소년의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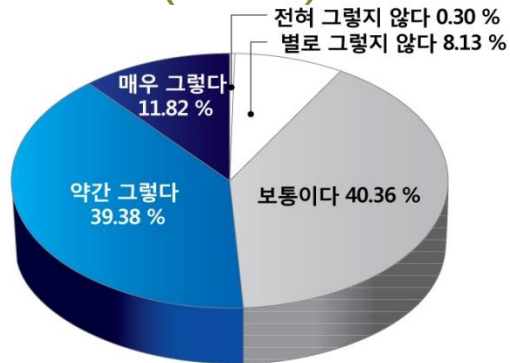
● 충남 청소년의 인권상황: 타율적 강압과 지역적 불평등

- ▶ 충남도민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여가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부당한 임금 등을 강요당한다고 인식
- ▶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 야간학습을 강요 받으며, 학교운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인식됨
- ▶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과 학습강요, 부당한 임금 등 청소년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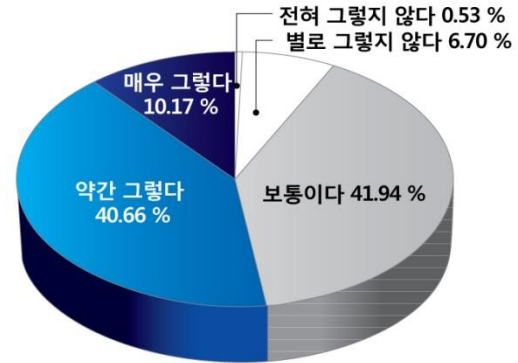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3 장애인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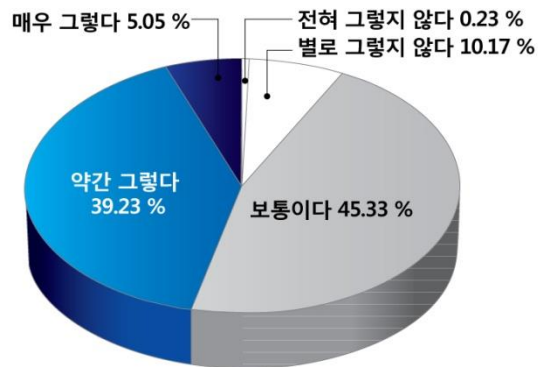
이동편의 시설부족
(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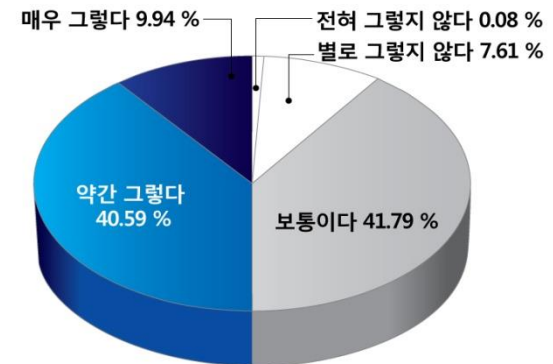
승진, 임금 차별(50.83%)



복지기관 장애인 의견 미
반영(51.51%)



학교 장애인 교육 편의시
설 부족(50.53%)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3 장애인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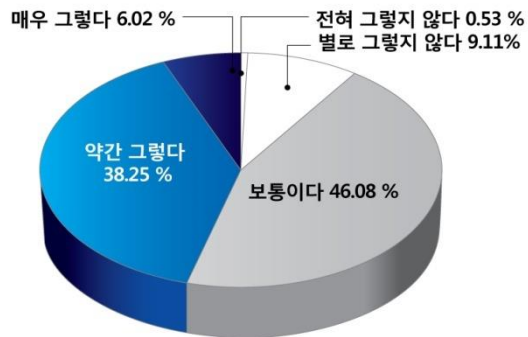
● 충남 장애인의 인권상황: 총체적 인권 소외

- ▶ 충남도민은 장애인들이 이동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어려움을 겪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할 경우에도 임금차별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
- ▶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 운영 시 장애인의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의 형태를 띠고 있음
- ▶ 교육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 투표의 어려움 등 도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충남 장애인들은 총체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검토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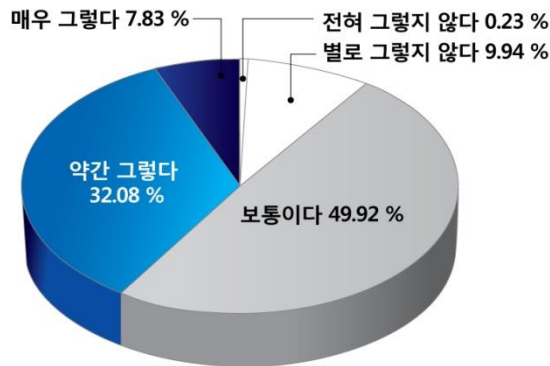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4 다문화 가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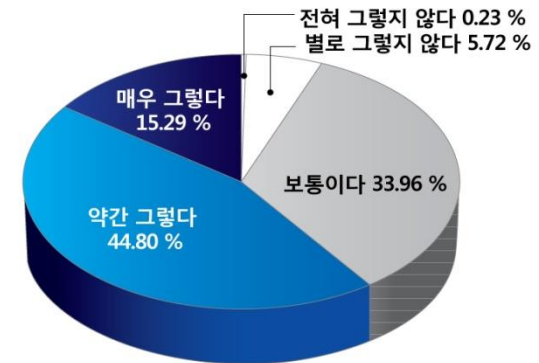
외모 차별(4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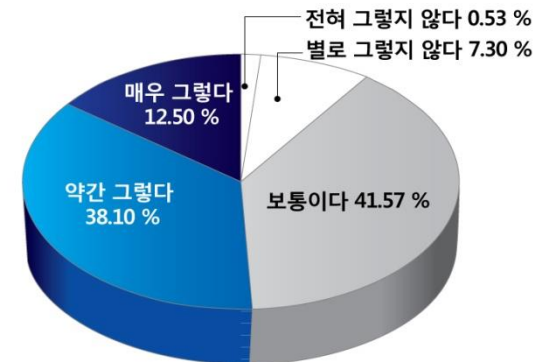
본인과 자녀 의료시설 이용불편(39.91%)



승진 임금 차별(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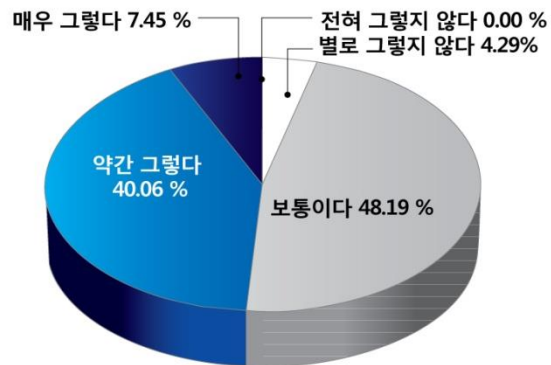
자녀 학교에서 차별 (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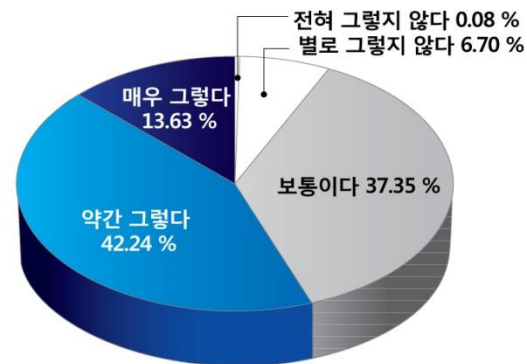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5 외국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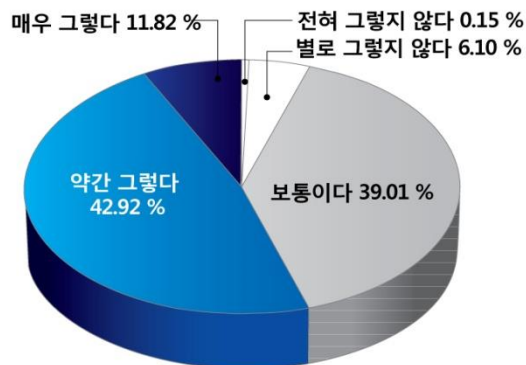
편견에 의한 차별(4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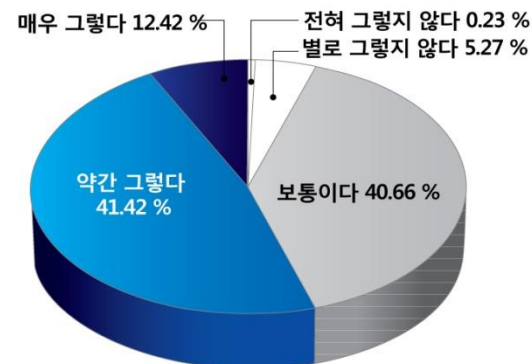
동일 노동 차별(55.87%)



의료/산재보험 혜택
어려움(44.27%)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부족(53.83%)



04_6 충남의 이주민

● 충남의 이주민: 편견과 문화적응의 어려움

- ▶ 충남의 이주민, 즉 다문화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과 외모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직장 내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적응이 힘들어 한국문화의 적응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됨
- ▶ 또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충남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7 충남 인권취약계층 분석의 의미

- 충남도민은 인권취약계층에 대해 일상, 경제,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함
- 그러나 본 충남도민 인권의식조사는 인권취약계층 당사자와, 활동가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태 파악 이후 각 계층의 인권 증진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증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책 개발 필요
- 또한 기존의 각 취약계층 별로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와 도의 다양한 사업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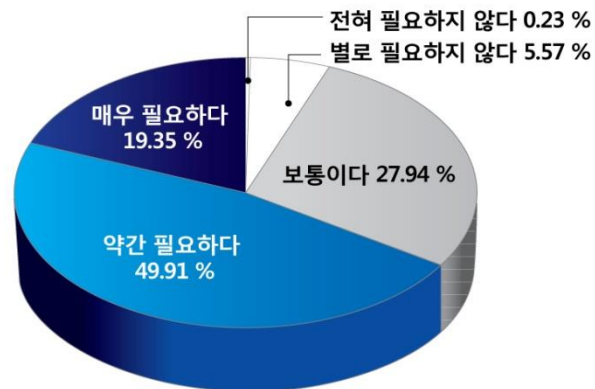


05_1 인권 교육 경험, 의향, 필요성

- 인권 교육 경험 및 의향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의향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12.95	87.05	65.14	34.86

-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정(6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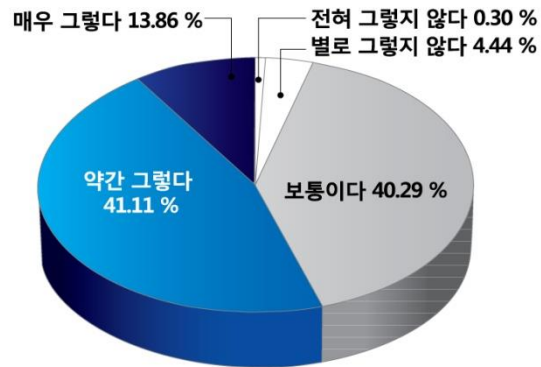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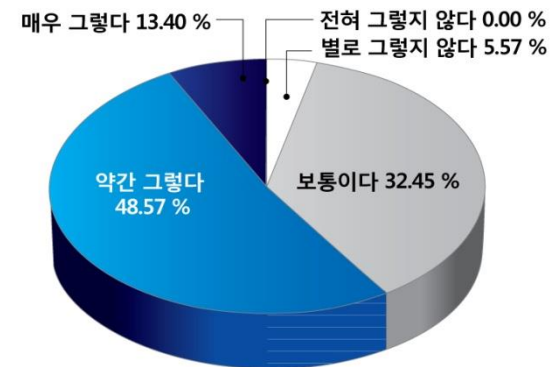


05_2 인권교육의 정규화, 모든 도민에게 인권교육 실시

인권 정규교육화(54.97%)



모든 도민 대상 인권 교육 실시 (61.97%)



05_3 충남 인권교육 조사 의미

● 충남의 인권 교육: 적은 경험과 높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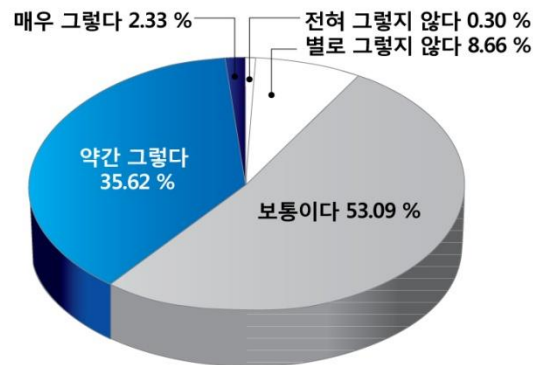
- ▶ 충남도민은 인권교육을 직접 받아본 경험은 적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도 높음
- ▶ 또한 인권교육의 정규화와 모든 도민의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긍정적
- ▶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인권 교육의 주제는 인권실태와 쟁점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
- 인권교육은 도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 따라서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의 형태, 주체, 상황,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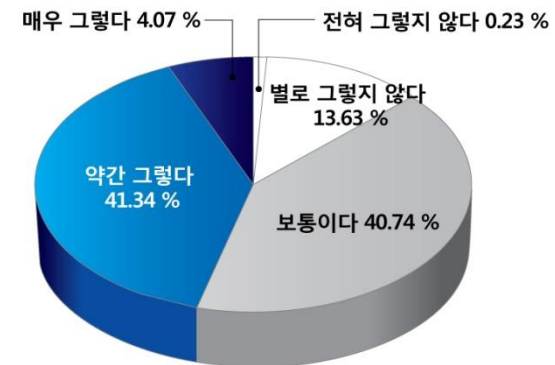


05_4 충남 행정의 인권보장, 인권증진 노력

행정의 인권 보장(3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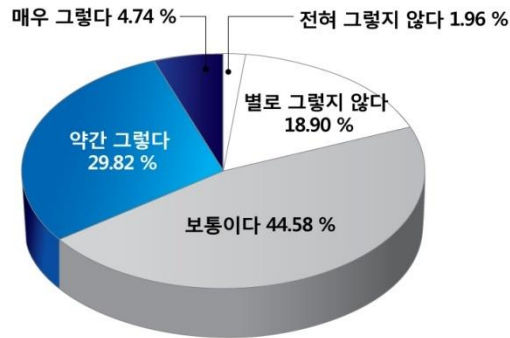
행정의 인권 증진 노력
(4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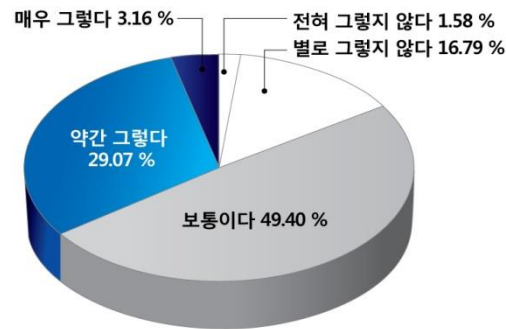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05_5 충남 행정의 인권보장, 인권증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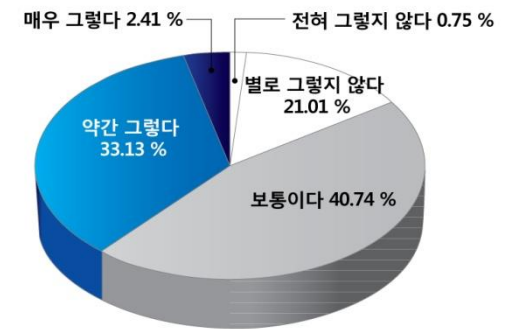
인권 증진 제도 정비
(37.95%)



도민, 시민단체와의 협력
(45.41%)



다른 시도와의 협력
(35.54%)



05_6 인권 증진에서 부족한 점

인권보장		(부정일 경우) 부족한점								
긍정	부정	도민 인권 의식	인권 보호 제도	인권 전문 가	공무 원 마 인드 부족	도민 약자 배려 부족	사회 복지 부족	도시 기반 시설 미비	시민 단체 부족	기타
49.32	50.68	14.77	19.50	10.64	20.38	12.41	8.12	8.86	5.32	0.00

05_7 충남 인권행정 조사 의미

● 충남의 인권 행정: 상반된 평가와 인식도 부족

- ▶ 충남도민은 인권행정에 대해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상당 수 존재하여 상반되는 입장을 보임
- ▶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증진제도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 충남의 행정에서 부족한 점은 공무원 마인드, 제도 미비, 도민 인권의식
- 인권행정은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 제도의 정비와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도 내외의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1 인권실태조사 요약

분야	분석 요약	시사점
일반적 인권의식 전국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평가는 전국=충남 • 제도 정비는 전국>충남 • 3년 인권개선 전국<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차원의 인권 증진 제도연구 • 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인권 침해와 침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적 인권 침해 심각 • 인권약자의 인권 침해 소지 • 침해 원인 경제력, 학력, 성별 순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양상으로 인권 침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 계층,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 최선의 경로 선택하여 증진방안 마련 필요
인권 침해의 경우 대응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대응이 가장 일반적 • 당사자와의 직접 해결 방법 선호 • 향후에는 적극적 해결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 부족보다 절차/방법 모름 • 대응 방법 개발 및 교육 필요 • 교육과 홍보의 병행
인권취약계층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모두 차별 존재 • 차별은 일상, 경제, 복지, 사회참여 모든 영역에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상황 조사 • 조사 내용을 종합 지역 차원의 인권증진 내용 도출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1 인권실태조사 요약

충남의 인권 교육

- 인권 교육 경험은 낮음
- 교육의향과 필요성 긍정
- 교육 주체와 대상에 다양성 인정



- 다양한 대상, 주체, 상황에 맞는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충남의 인권 행정

- 행정의 인권보장, 노력에 긍정적
- 제도정비, 거버넌스에 긍정적이거나 많은 부정적 평가
-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음



- 지역차원의 행정적 욕구 파악
- 제도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방향

-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지방정부-시민사회-타시도-도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권문화 조성 and 인권교육 체계 정비 및 실행 방안 마련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서울인권정책 1차 기본계획(2013)

- ▶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나나나)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는 행복한 서울

- ▶ 서울시 기본계획의 방향
 - 서울시 행정에 인권관점을 도입한 인권정책의 청사진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
 -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관점의 정책방향 수립
 - 기존사업을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조화
 - 의미 있는 기존사업 확대 발전하고, 기존의 문제 있는 행정관행 개선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2011)

▶ 비전: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 목표

- 시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
-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정책

▶ 지향점

- 참여공동체: 시민 모두가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도시
- 돌봄공동체: 사회적 배려와 나눔으로 삶이 안정된 인권도시
- 연대공동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차별을 없애는 인권도시

▶ 광주광역시 인권기본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을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 시도
-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시민의 생활단위에서 인권 정책의 실질화 시도
- 광주의 인권도시 브랜드화 시도
- 광주의 역사적 자원(5. 18 민주화 운동)을 활용한 인권 정책 시도
- UN과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 국제적 공인 획득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많은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 이로 인해 일상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2011)

- ▶ 비전: 노동과 인권이 어우러진 인권도시 동구
- ▶ 목표: 인권존중 기초자치단체 실현
- ▶ 추진전략
 - 인권친화적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 동구의 미래상 구현
 - 지역생활밀착형 분야별 인권실천계획 수립
 - 동구 인권도시 선언 및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 ▶ 울산동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지역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통해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선도
 - 노동자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성 고려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의 조화
 - 구체적인 실태 및 의식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진행되어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 존재

06_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서울 성북구 인권기본계획(2013 진행 중)

- ▶ 비전: 인권도시, 성북
- ▶ 목표: 인권이 실상화 된 도시, 인권도시 성북
 -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구조 창출
 -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
 -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전제
- ▶ 추진전략: 단계적 추진, 총체적 접근, 인권 거버넌스 구축
- ▶ 서울 성북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기본권에 근거한 인권계획의 시행하려는 시도, 특히 최저생계의 보장을 인권을 위한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
 -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하여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
 - 인권지표의 개발 및 시행 등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밀착형 현안 중심의 사업추진

06_4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함의

●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인권 정책 시도

- ▶ 서울시의 경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모토로 인권의 보편성 실현을 위한 계획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 ▶ 성북구의 경우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을 시도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권 정책 시도

- ▶ 광주의 경우 5.18이라는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서 인권정책 추구
- ▶ 울산 동구의 경우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노동과 어우러진 인권 계획 수립

● 기존 다른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시도

- ▶ 인권 정책은 기존의 정책, 특히 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 기존의 정책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 이를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 발전시킴
- ▶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추진

06_5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도출된 원칙

- **[도민의 삶의 밀착성]** 행정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실무자들의 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의 수립
-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충남도민 누구도 예외 없이 기본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수립. 특히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 필요
- **[지역의 특수성]**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이자,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정책 수립
-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인권정책은 복지정책 등 기존의 정책과 세부 사업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대 발전시키고, 일회적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정책 수립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6 충남 인권증진기본계획 구상(안)

목표	일상생활 속에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			
전략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정비	인권 문화 조성과 확산	인권 거버넌스
실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취약계층 인권 증진 • 인권취약계층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친화적 행정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정비 • 인권감수성 높이는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시민 참여에 기반한 인권 문화조성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부 문		사 업 명	기존사업관계	
			기존	신규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 • 독거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멘토 시스템 • 특별활동에 청소년 의견반영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구축 • 학교 내 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이동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 언어장벽 없애는 통역지원 서비스 • 다문화 가족 아동 교육 지원 • 민·관 협동 이주민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인권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상담 센터 운영 • 내포신도시 인권친화 공간조성 • 투표편의시설(노인, 장애인, 이주민) 확보 • 인권피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행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인권담당관 설치 •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안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안전체계 정비 • 생명존중(자살예방)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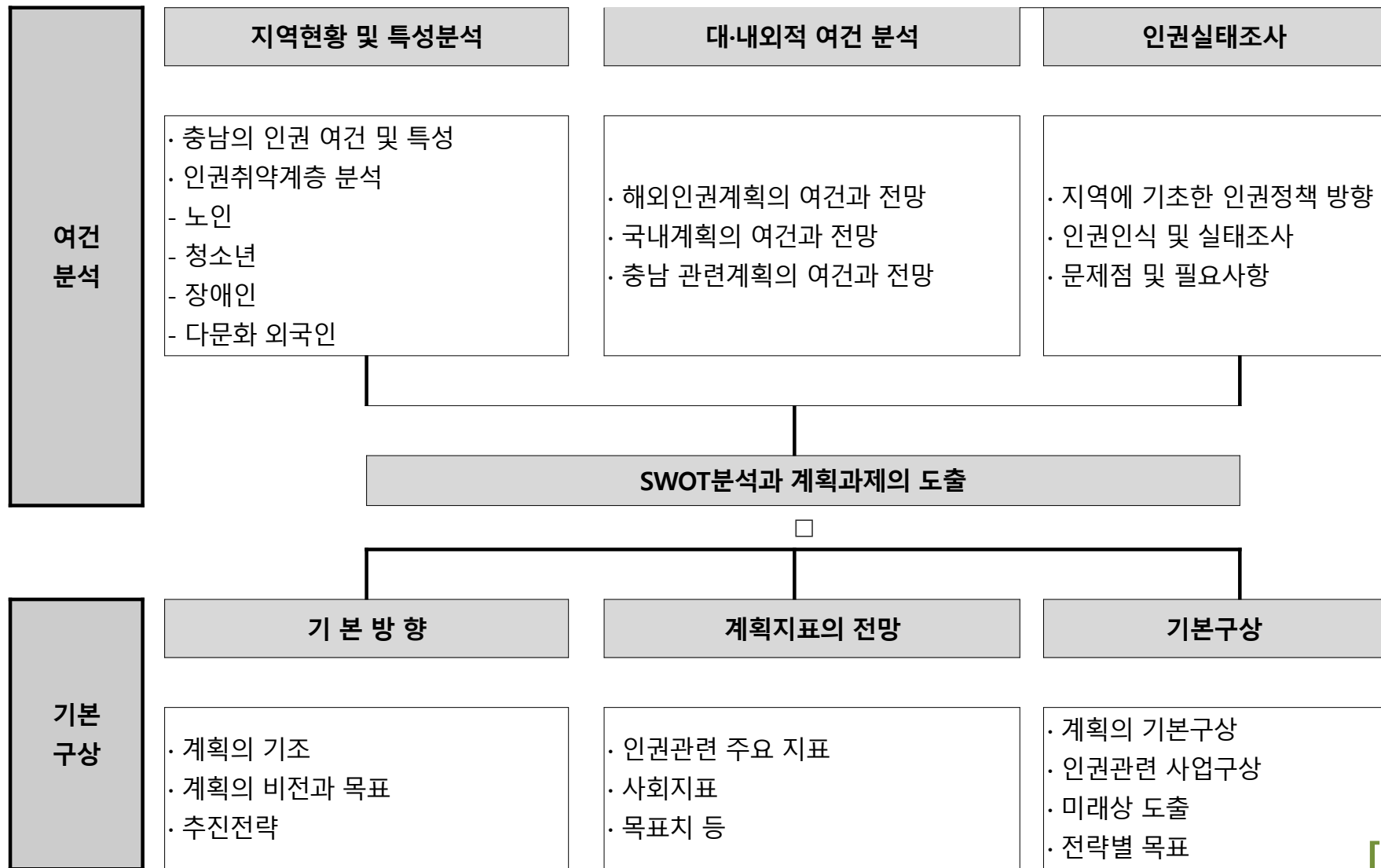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인권문화 조성 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교사 양성 • 인권교육 시민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권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 도민대상 인권아카데미 운영 • 도내 기업 대상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권 거버넌스	시민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인권협의회 정기개최 • 교육, 상담 등에 NGO 협력체계 구축 • 도내 인권 NGO 네트워크 지원 • 국내/국제 인권 네트워크 구축 • 이주민 정착지원 민. 관 네트워크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도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참여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 옴부즈만 제도 운영 • 도민과 함께 하는 인권행사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06_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6_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부문별 계획	인권제도 정비		인권 문화조성과 교육		인권 거버넌스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친화적 행정제도 정비 · 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		· 인권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 인권감수성 높이는 교육 시행		·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 도민 참여의 제도화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
·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확보		· 청소년 노동 인권 · 상담 및 멘토 시스템 · 자율적 특별활동 운영		·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 인권친화적 교육 지원 · 이동권 강화		· 사회적응 프로그램 · 다문화 아동 교육 · 의료서비스 지원	

06_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핵심전략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투자 및 집행계획

- 투자사업계획
- 재원조달방안
- 사업추진매뉴얼

06_9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안)의 한계

- **충남의 인권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현재의 구상(안)은 충남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인권기본계획, 충청도의 다른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서 인권취약계층, 인권활동가 등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충남 인권증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 미진**

- 충남 인권증진계획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행정담당자-인권 시민사회단체-인권취약계층-도민)들의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음

- **인권의 지역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학계에서 논의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인권개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민의 일반적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만 시행
-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권도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농이 혼재되어 있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공청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과 실태조사를 거쳐 충남의 여건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06_2 실태조사와 계획(안)의 한계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이번 보고의 조사결과와 계획안에 대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과제 산출
- 이어지는 충남 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 이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 필요
- 인권취약계층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정책 집행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해 도출되는 사업과 실제 수행 가능한 정책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